

뜀쭈날쭈 사립유치원 교육비, 일관된 기준 없어

2만원에서 10만원 넘는 곳까지 천차만별, 간식비·교통비 등 추가 징수도 예사

조기교육열의 상승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맞물려 육아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유치원이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 부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제몫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80년대에 전국 5세 아동을 기준으로 취원률 7.3%, 유치원수 9백여개이던 것이 92년에는 취원률 46.7%, 유치원수 8천3백26개(공립4천5백93개, 국립1개, 사립3천9백32개)로 괄목할만한 수적 성장을 해왔다. 그중 서울시에만 29개 공립유치원과 1천3백33개의 사립유치원이

설립돼 있다.

이들 중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립유치원은 무료인 곳도 있고 한달에 2만5천원으로 서민 대상의 비교적 낮은 교육비를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차원의 교육비책정 기준이 정확히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유치원 원장의 자율적인 권한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2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오는 3월 초 유치원 개강일을 앞두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고급사립유치원과

경영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사이에 교육비 책정에 관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김필본(유아교육 행정계) 씨는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교육비는 각 교육구청 자율장학협력회에서 최저 2만5천원, 최고 7만5천원의 한계를 그어놓고 물가지수에 맞추어 과도한 인상을 금하는 정도에서 원비를 조정한 후 원장의 자율권한으로 일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원생들의 교육비로 운영을 해나가는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비 외에 간식비, 자모회비, 견학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규모와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교육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호화사립유치원에서는 교육청의 삭감분까지 계산에 넣고 과도한 교육비를 책정하기 일쑤다.

초호화시설에 고액의 교육비

를 징수하는 고급유치원들과 정원도 안 차는 적은 수의 아동으로 열악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유치원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서울시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박준호(수유리 화계유치원) 회장은 “올해에도 76개 유치원만 정원이 찼다. 나머지 유치원이 국가보조가 없이 재정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지 미지수다.”고 말한다.

박준호 회장은 또 일부 고급

유치원들의 모습이 과장되게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통해 사립유치원 전체에 일반인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급유치원들과 일부 신생 아파트촌의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립유치원들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한다.

교육부 유아교육담당관인 반운경 씨는 이러한 사립유치원간의 불균형현상에 대한 치유책을 정부쪽에서 제시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 같은 곳에서 교육비를 책정하고 조정하는 자체 운영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자구책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한다.